

북한도시연구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황진태***

1. 기획의 취지

2024년의 북한학계에서 북한도시는 더 이상 몇몇 연구자들만이 다루는 소수 분야가 아니다. 2000년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0년대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가 북한도시 연구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마중물이 되었던 덕에 북한학에서 북한도시는 주요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반면에 공간이론과 도시이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리학계에서 북한도시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번 특집호는 비판적 공간이론 연구를 이끌어 가는 《공간과사회》에서 북한도시에 대한 북한학과 지리학의 대조되는 연구풍경을 조망하고,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공간·도시 연구자들의 북한도시에 관한 관심을 역설한다. 궁극적으로 북한학과 공간·도시 연구자들 간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편집의 글」에서는 현재 당면한 북한도시연구의 세 가지 한계를 짚으면서 특집호

* 동국대학교(서울) 북한학과 조교수(dchjt@dongguk.edu)

** 이번 특집호 논문들에 대한 세심한 교정을 해주신 한울엠플러스 편집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들을 소개한다.

2. 첫 번째 한계: 평양중심주의

평양중심주의는 북한도시연구의 사례지역이 압도적으로 평양에 쏠려 있는 경향성을 가리킨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갖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징성으로 인하여 연구자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평양을 우선하여 연구지역으로 선정한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체제 선전·경쟁의 일환으로 북한 당국이 평양을 적극적으로 대내외 매체를 통해 홍보하면서 북한을 방문하기 어려운 연구자들로서는 다른 도시들보다 평양 관련 자료를 획득하기 쉽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가리키는 맨해튼을 전유하여 해외 언론은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평양해튼’으로 명명할 정도로 평양의 도시공간 변화가 역동적이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연구자들이 분석대상으로 평양을 선택한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특집호에서도 총 5편의 논문 중 3편은 평양 연구라는 점에서 평양중심성이 재확인된다.

김태윤(2024)의 논문은 1950년대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 과정과 평양의 도시공간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주목한다. 1956년에 발생한 소위 ‘8월 전원회의 사건’은 북한에서 김일성과 대립해 온 계파들이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마지막 사건이자 김일성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8월 전원회의 사건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김일성 우상화, 중공업 중심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에 초점을 두었다면, 김태윤의 연구는 전원회의 사건 이후 보다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김일성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평양 개발을 시작했음을 주목하여, 그러한 중앙정치의 권력관계 변화가 평양 도시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평양속도’ 신화와 조립식 건설 방식의 적극 수용과 긴밀히 관련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 통치전략으로서 김정은의 평양 개발은 선대로부터 계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두 논문은 평양의 시계를 현재로 이동한다. 이종겸(2024)의 논문은 2021년부터 연 1만 세대 규모의 주택을 5년 동안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평양 5만세대 건설계획을 주목한다. 이종겸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핵심세력인 평양시민들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이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나아가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뉴타운’ 용어를 북한의 5만세대 건설에 적용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의도뿐만 아니라, 새롭게 건설되는 주거공간이 평양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인식, 이용될 것인지를 추정하는데, 서울 주변에 건설된 일산, 분당 등의 1기 신도시처럼 평양 도심의 외곽에 건설되는 5만 세대 지구들도 침상도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황주희(2024)의 논문은 평양에서 상권이 존재하는지를 포착하려 한다. 지금 당장 핸드폰에서 구글맵을 열면 지구 반대편 뉴욕의 어느 골목에 위치한 상점의 영업시간, 판매 제품을 확인하는 데 1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평양의 상업시설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별자리를 모르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장기 경제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과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황주희는 김정은 집권 시기에 발간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700여 건의 상점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평양의 구역별 상점 수를 파악하고, 어디에 해당 시설(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상권의 세 유형으로 구분)이 입지하는지를 지도화 작업을 한다. 이러한 도시 상권의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평양 상권의 발달은 북한 당국이 주도하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특성이 도시공간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그간 주목하지 않은 자료를 발굴하거나 참신한 인식을 적용함으로써 아직도 새로운 평양연구가 가능함을 환기한다. 하지만 평양 이외 북한도시연구 현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성찰과 긴장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평양이 곧 북한도시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시효(2024)의 논문은 평양을 벗어나 개성을 주목했다는 점만으로도 평양 중심주의를 흔드는 시도이다. 국내 북한도시연구 현황을 정리한 박성열 외(2021: 138~139)에 따르면, 평양 다음으로 연구성과가 많은 도시는 개성이다. 이는 남북 경협 산물인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남북한 간의 다양한 접촉이 이뤄지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아진 덕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시효의 연구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어느덧 십 년이 가까워지면서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진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기록치 않은 연구환경에서 그는 위성자료(야간조도, 건물밀도), 탈북민 심층인터뷰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성공단 운영이 개성의 도시공간과 주민들의 일상과 인식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경제특구는 주변 지역의 도시화와 거주민의 생활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상기하면, 개성공단도 개성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처럼 북한학계에서 확인된 평양중심주의에 대한 진단도 도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리학계를 향하면 북한도시연구의 축적이 빈약한 불모지를 마주하게 된다. 온라인 학술지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연 3회 발간, 1998년 창간)는 개성(2023), 평양(2022), 북한도시 이론(2022, 필자 작성), 이상 총 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연 4회 발간, 1995년 창간)는 해산(2010), 무산/회령(2011), 평양(2020, 필자 작성), 개성(2021)으로 4편이 확인된다. 국내 지리학계의 대표성을 띠는 《대한지리학회지》(연 6회 발간, 1963년 창간, 2000년 이후 논문만 검색)는 개성(2006, 2011, 2020, 2023), 북한의 지역격차(2000), 이상 5편을 확인했다. 흔히 지리학에서 북한도시를 포함해 북한연구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료 습득의 어려움, 현지답사의 불가능을 언급한다. 하지만 북한학계에서 특정 도시의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중심주의라는 딱지를 붙일 정도로 연구가 진전되어 온 것에 비춰,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북한에 못 가는 상황이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핑계로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아직 어둠에 감춰진 무수한 북한도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3. 두 번째 한계: 방법론적 도시주의

첫 번째 한계로 지적한 평양중심주의는 다른 북한도시들의 블랙박스를 열어 야 한다는 시급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동시에 블랙박스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도시주의(methodological cityism)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 도시주의란 지도상에 그려져 있는 행정경계 안(즉, '평양', '원산', '서울', '부산'과 같은 행정지명)에 형성된 높은 건물, 높은 인구밀도, 고차산업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내적, 영역적(territorial) 특성을 과도하게 주목하면서 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도시 밖의 비도시(자연, 촌락 등), 다른 도시·지역과 정치·경제·문화·생태적으로 맺는 관계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비판하고자 제기되었다(Angelo and Wachsmuth, 2015).

방법론적 도시주의의 성찰을 북한도시연구에 적용하면, 평양의 발전뿐만 아니라 평양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인력, 자원이 평양 '외부'로부터 탈취되며, 탈취된 외부는 평양의 발전과 대조되는 저발전을 초래하는 과정까지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 도시의 안과 밖의 관계를 밝히는 데 방법론적 도시주의적 성찰이 효과적이지만, 개별 도시들을 넘어서 보다 총체적으로 북한도시에 대한 중범위 수준(meso-level)의 개념화로 사유가 진전될 수도 있다. 가령, 필자는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을 ① 분산된 도시 간 공간구성, ② 도시 간 교통 인프라의 불균등한 발전 양상(평양에 집중된 고속도로망 등), ③ 분산된 공간구조를 정당화하는 담론(자력갱생, "도시 부럽지 않은" 등)이라는 특성을 도출하면서 진지전 도시화(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황진태, 2023). 이러한 개념화는 북한도시에 대한 관계적 접근(도시의 내부-외부, 도시-도시, 도시-비도시 관계 등)의 중요성과 함께 그간 북한도시연구에서 덜 주목한 도시의 영역을 벗어나 작동하는 당·국가 차원의 논리와 전략(예컨대, 군사적·지정학적 측면)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이번 특집호의 마지막 논문인 강연지·황진태(2024)는 도시와 비도시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도시주의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녹아 있다. 2019년

하노이 노딜(no deal) 이후, 대내적으로 지역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기 시작한 김정은 정권은 전국적인 ‘도시거름 수송전투’를 장려하고 있다. 저자들은 도시에서 발생한 오물이 농촌지역으로 이동하여 식량생산을 위한 거름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도시거름 수송을 사회주의 근대화·산업화로 단절된 도시와 농촌 간의 신진대사를 회복하는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도시거름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 하노이 노딜이 상징하는 대외관계 악화와 제재의 지속이 자리한다는 점에서 ‘수세적’ 대응으로도 진단한다. 즉, 대외관계 회복, 제재 완화와 같은 구조적 제약의 개선 없이는 도시거름 수송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방법론적 도시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확보가 관건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에 대한 영역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론의 문제임을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강연지·황진태(2024)의 도시거름 연구 이전에 도시거름을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저자들은 농촌과 친밀한 물질인 거름에 도시가 붙은 신조어에 대한 낯센으로부터 도시와 비도시 관계로 문제의식을 확장하게 된 것도 인식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외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의 외부에서 새로운 자료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미 자료가 축적된 도시들을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함으로써 방법론적 도시주의를 극복할 연구가 나올 수 있다.

4. 세 번째 한계: 학제적 연구의 어려움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지만, 북한도시연구는 필연적으로 학제적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도시연구의 선구자인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완규 교수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방법에 착목”(최완규, 2004: 10)하는 것을 북한연구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헌의 내재적 접근과 인공위성 자료와 같은 외재적 접근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시이론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절묘한’ 연구를 연구자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가령, Hwang, 2024), 그러한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상이한 배경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의 마주침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지리학자들의 역할을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지리학자들은 공간·도시이론에 밝다. 지리학 전공자인 필자의 관점에서 북한학 연구자들이 공간·도시이론을 북한도시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개념적 엄밀성, 공간에 대한 인식·이해·재해석에 아직 아쉬운 지점들이 있다.¹⁾ 북한학 연구자들이 북한 원전을 활용한 내재적 접근에 밝다면, 지리학 전공자들은 공간·도시이론에 상대적으로 밝다. 양측의 상호 보완 가능성의 지평은 넓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이다. 북한연구방법론의 고질적 문제인 자료의 부족은 지도화, 시각화, 통계 기법의 발달에 따른 지리학의 방법론적 혁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일정 부분 자료 부족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국내 지리학계의 북한도시연구에는 무산/회령 연구가 있다(이민부 외, 2011). 원격탐사와 GIS를 활용해 무산, 회령의 토지이용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한 이 연구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학 연구자들이 보기에 놀라운 시각화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논문은 놀랍게도 북한 문헌은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저자들 중에서는 연변대 지리학과와 인문지리학 전공 교수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지리적 분석은 누락된 것이다. 해당 논문이 양적방법론이 핵심적이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 정책에 대한 분석이 가미되었더라면 분석의 품미는 한층 깊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리학계의 양적방법론과 북한학계의 질적방법론의 적절한 혼합으로부터 좋은 학제적 연구가 나올 것이다.

최근 필자가 연구책임을 맡은 정부연구용역인 <북한 주요 재해·재난 취약공

1) 물론 국내 지리학자들 중에도 서구 학계에서 고안한 개념을 기계적으로 한국 사례에 적용하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부터 비판적,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자까지 스펙트럼은 넓다.

간 및 대응 인프라 지도> 연구는 북한에서도 재해·재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도시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시각화, 지도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북한학 전공자들과 양적방법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리학 전공자들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학제적 연구를 시도한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북한도시의 학제적 연구를 진전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5. 한계를 안고서 앞으로 나아가자!

을 초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진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 교류의 시기에는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여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통일 논의를 진전시킬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분단체제가 종료되기 전까지 좋은 나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북한연구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 제기한 북한도시연구와 관련한 세 가지 한계들은 비단 학술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북한도시를 우리 사회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채 블랙박스로 두는 것은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과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절묘하게 조응한다. 우리 학계와 사회가 직면한 한계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핑계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발판으로 삼자!

참고문헌

- 강연지·황진태. 2024. 「도시와 거름: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신진대사 관계 고찰」. 《공간과사회》, 제34권 2호. 142~182쪽.
- 김태윤. 2024. 「도시건설의 효율성 제고와 건축기술의 전환: 1950년대 북한의 정치 상황과 평양」. 《공간과사회》, 제34권 2호. 14~42쪽.
- 박성열·이은정·이정요·한지만. 2021. 「북한도시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행연구 분석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7권 1호. 129~162쪽.
- 이민부·김남산·김석주·김애분·주철. 2011. 「북한 무산시와 회령시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생태서비스 가치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4호. 493~504쪽.
- 이시효. 2024. 「개성공단 운영이 개성시 공간과 일상에 미친 영향 분석: 위성자료와 심층인터뷰 혼합연구」. 《공간과사회》, 제34권 2호. 109~141쪽.
- 이종겸. 2024. 「침상도시로서 평양시 뉴타운 계획」. 《공간과사회》, 제34권 2호. 70~108쪽.
- 최완규 엮음. 2004.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한울아카데미.
- 황주희. 2024. 「평양시 상권분석과 정치경제적 함의: 유형화와 발달 요인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제34권 2호. 43~69쪽.
- 황진태. 2023.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통일연구원.
- Angelo, H. & Wachsmuth, D. 2015. "Urbanizing Urban Political Ecology: A Critique of Methodological City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39, No.1. pp.16~27. DOI: <https://doi.org/10.1111/1468-2427.12105>
- Hwang, J. T. 2024. "Finding Symptoms of (Under)Privileged Urban Nature in a Socialist City: The Case of Pyongyang, North Korea." *The Professional Geographer*, DOI: <https://doi.org/10.1080/00330124.2024.2355181>